

제 1 장

국회의원과 정책

박 세 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 들어가는 말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기원한다. 그런데 정치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하나는 정치제도가 올바르게 서야 한다.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치자금제도, 국회조직 및 운영제도 등이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정치지도자들이 훌륭한 능력과 품성을 가져야 한다. 한 시대를 이끌고 갈 자질과 덕성이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두 번째 문제를 주로 다루도록 한다.

그러면 훌륭한 정치지도자, 바람직한 국회의원이란 어떠한 능력과 덕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가? 이 문제에 답하는 것은 곧 어떠한 능력과 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바꾸어 말하면 어떤 능력과 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야 하는가, 혹은 우리는 어떤 능력과 덕성을 가진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답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정치지도자, 바람직한 국회의원이 되려면 우선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하여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우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성공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최소조건이다.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변화와 개혁의 시대이므로 한 국가 당면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국가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첫째 조건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고유역할과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국회의원들은 우선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하고 국민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각종 법률을 만드는 입법활동을 잘 해야 하고, 예산결산의 심의확정 등 재정활동을 잘 해야 하고,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행정부 감시감독 활동을 잘 해야 한다.

둘째 조건은 우리나라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가치를 창조하고 기존의 사회가치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한마디로 '가치변환의 리더십'(value transforming leadership)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처하여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지방화, 민주화, 노령화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문명사적 변혁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시스템, 국가조직과 운영시스템을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변화하고 개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가 이미 외부로부터 밀려오고 있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국가발전단계가 종래의 개발연대의 국가주도의 시스템으로서 더 이상 발전이 어려운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한마디로 관치의 시대는 끝나고 있다. 이제 시장과 시민사회가 보다 많은 역할을 하여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민관협치(民官協治)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한 방향으로 국가시스템을 변화하고 개혁하여야 우

리나라도 명실공히 중진국을 벗어나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가 이미 내부로부터 치올라오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와 같이 변화와 개혁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는 헌법상 요구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만을 잘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시스템의 변화와 개혁을 올바르게 수행해 나갈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의 지배적이고 중심적 가치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갈 '가치변환의 지도력'이 추가로 요구된다.

다음에서 우리나라 정치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과 능력, 자질과 품성을 4가지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4대 능력과 덕목

우리나라 정치지도자, 국회의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덕목과 능력이 요구된다.

1) 가치창조력과 가치변환 능력

변화와 개혁기의 정치지도자는 무엇보다도 가치창조 능력과 가치변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가치란 당시 그 사회의 지배적 중심가치를 의미한다. 예컨대 시대에 따라서 자유가 중심가치일 수도 있고 형평이 중심가치일 수도 있다. 혹은 부국강병(富國強兵)이 지배적 가치일 수도 있고 부민안국(富民安國)이 지배적 가치일 수도 있다. 성장이 지배적 가치일 수도 혹은 환경이 지배적 가치일 수도 있다. 어느 사회이든 지배적 중심가치 내지 가치군(價値群)이 있고 이 지배적 중심가치는 그 시대 다수 국민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들의 행동패턴을 결정한다.

본래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란 그 사회의 지배적 중심가치가 재정립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그런데 가치의 재정립은 새로운 지배적 가치를 창조하고 '구(舊)가치'를 '신(新)가치'로 변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화와 개혁시대의 정치지도자는 반드시 새로운 사회가치를 제시하고 구가치를 신가치로 변환시키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것을 바로 동양철학에서는, 즉 사서의 하나인 《대학》(大學)에서는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신민’(新民)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백성을 새롭게 하려면 두가지 조건이 먼저 성립되어야 가능하다.

하나의 정치지도자들이 정치인 이전에 우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의(誠意)이다. 《대학》에 의하면 성의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정직, 정성, 정심(正心)의 덕목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정심(正心)이 되어야 수신(修身)이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수신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치인(治人), 즉 정치를 시작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정치지도자는 반드시 ‘공직자 내지 공인으로서의 기본적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지도자는 더 이상 사익을 추구하는 사인이 아니다. 공의(公義)를 추구하는 공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선공후사(先公後私)하는 마음과 자세이다. 역사의 고금과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사심이 앞서면 절대로 공(公)을 이룰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무사공심(無私公心)이 되어야 비로소 치인(治人)하고 치국(治國)할 수 있다.

이상의 두가지 덕목을 가져야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 즉 신민(新民)을 시작할 수 있다. 즉, 이 사회의 지배적 중심가치를 바꾸는 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국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이 하여야 할 우리 사회의 지배적 중

심가치의 변환은 어떠한 내용이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지금 4가지 방향으로의 가치변환이 요구되고 이를 성공적으로 리드할 가치변환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대외지향적으로 열린 가치관이다.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로서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항상 외침이 많았기 때문에 대외지향성보다는 대내지향성이 강한 민족이다. 대외에 대하여는 배타성이 강하고, 닫힌 민족주의가 강한 민족이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오래된 우리의 사고패턴을 빨리 바꾸어 나가야 한다. ‘닫힌 민족주의’에서 ‘열린 민족주의’로, 대내지향에서 대외지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국민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야 21세기 우리 민족이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다.

지난 세기 2차 대전 이후 후진국의 경제발전사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특징은 대외지향적(outward looking) 경제전략을 선택한 나라는 발전하였고, 대내지향적(inward looking) 정책을 선택한 나라는 낙후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수출지향적(export promotion) 경제성장전략을 택한 나라들은 발전하였고,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수입대체적(import substitution) 경제성장전략을 선택한 나라들은 후진하였다. 최근에는 중국이 종전과 달리 수출지향, 대외지향으로 그 기본 국가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1세기 세계화시대에는 더욱 대외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세계화를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포착하여야 한다. 세계화의 물결을 적극적으로 타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내부에는 민족자주, 농업절대보호 등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주장과 사고들이 너무 많다. 요즈음 칠레와의 FTA에 대한 국회심의회가 수 차례에 걸쳐 파행되고 지연되었던 것도 우리 국민의 사고 속에 얼마나 대내지향적 사고가 뿌리깊은가를, 그리고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잘못된 국민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주지 못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발전에 저해되고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잘못된 사고와 가치를 고쳐주는 일에 정치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변화와 개혁의 시기에 정치지도자들이 해야 하고 가져야 할 자세와 자질이다.

둘째, 차별적 보상의 가치관이다.

우리민족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대외개방성보다 대내지향성이 강하면서도 동시에 사회내부적으로는 '결과에 대한 평등의식'이 대단히 강한 민족이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다민족사회가 아니고 단일민족의 사회이기 때문에 결과의 차이와 차별을 용인하는 수준이 대단히 낮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결과의 평등을 선호하는 사회적 가치관은 성장과 발전에 대단히 해롭다. 물론 '기회의 평등'은 어느 사회이든 반드시 보장되고 지켜져야 할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이다. 그러나 '결과적 평등'은 사회 발전에 역행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세계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에 결과의 평등을 선호하면 그 사회는 반드시 후진하고 낙후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들은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발전을 저해하는 가치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가치관을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한다. 결과의 평등을 선호하는 가치관에서 기회의 평등을 선택하는 가치관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노력의 차이에 따라 보상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차별화하는 가치관으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나오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으며, 모두가 그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회는 발전하고 경제는 성장한다. 따라서 결과평등을 선호하는 가치에서 노력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지배적 중심 가치관을 변화시켜 내는 것이 이 시대 정치지도자들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능력이고 덕목이다.

셋째, 공동체 존중의 가치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공동체 존중의 가치관이 회복되어야 한다. 우

리나라는 본래 가족과 가문을 중시하고 이웃과의 나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예절을 대단히 중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화, 서구화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개체가 강조되면서 공동체적 연대와 이웃과의 나눔은 급속히 약화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가족이라는 사회공동체의 가장 기초단위도 일부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리라 생각한다. 공동체연대는 약화되고 사회는 급속도로 개개인으로 파편화되고 유동화되어 나갈 것이다. 물론 사회발전의 원동력은 개인의 창의와 자유이다. 그러나 공동체적 연대와 사랑이 같이 가지 않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결국은 자기부정 내지 자기파괴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가 개체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앞으로 어느 사회와 어느 국가가 더 발전할 것인가는 어느 사회, 어느 국가가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보다 많이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 연대를 잘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공동체 존중의 가치관을 회복하고 이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훌륭한 지도자는 국민의 가치관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지도자이다. 사회의 지배적 중심가치관을 바꾸는 지도자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가 바로 변화와 개혁의 시기에 가장 요구되는 지도자이다. 왜냐하면 변화와 개혁이란 결국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와 개혁이기 때문이다.

넷째, 선비정신의 가치관이다.

우리 고유의 전통인 선비정신의 가치관이 회복되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는 거의 모두가 선비출신이었다. 선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정치지도자가 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선비들은 선비정신이 있었고 이 선비정신이 바로 우리나라 치인학(治人學) 내지 안민학(安民學), 즉 '정치하는 법'의 기본이 되어왔다. 즉, 이

선비정신이 정치지도자들의 마음가짐과 행동거지의 기준과 지침의 역할을 하여왔다. 그런데 19세기 말 근대화 프로젝트에 실패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선비정신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한마디로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상위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가 쇠퇴하기 시작한 것이다.

선비는 본래가 그 시대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격체를 의미한다.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인격체를 의미한다. 한 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을 정립하고 그 공동체가 나아갈 이상을 제시하며 역사를正道(正道)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우리는 선비라고 불렀다. 이들은 독서와 수양으로 자기를 단련하고 강학과 행도로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런데 이들 선비들의 가치관, 즉 선비정신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신의 사적 욕심과 이익을 극복하고 '천하의 일을 천하의 마음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천하의 마음으로 천하의 일을 보아야 한다. 노자의 《도덕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천하(以天下) 관천하(觀天下)하여야 한다. 여기서 천하의 일이란 국정운영, 즉 정치를 의미하고 천하의 마음이란 곧 백성의 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자기의 이해를 떠나 백성의 이해관계에서, 백성의 마음으로, 천하의 일을 생각하고 처리해야 한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바로 선비정신의 첫째 핵심이었다.

다른 하나는 역사의식이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 눈 오는 깊은 밤에 혼자 길을 걸어도 바른 자세로 똑바로 걸어서 혹시 뒤에 올지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눈 위에 바른 발걸음의 자국을 남겨주려는 마음이다. 묵에 칼이 들어와도 후학을 위하여 바른 역사의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자세이다. 원칙과 가치를 지키려는 자세이다. 원칙 없는 타협을 거부하는 자세이다. 이러한 역사의식이 선비정신의 두 번째 핵심이었다.

요약하면 하나는 '백성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삼고 다른 하나는

'역사의 눈'으로 '자기의 눈'을 삼는 자세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선비정신의 핵심이었고 올바른 정치지도자의 마음이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들 선비정신을 부활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에 본래 있던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제왕학, 안민학, 치인학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지도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야 한다. 지도자가 되려면 각고의 자기억제와 자기수양이 반드시 따라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정치지도자가 존경받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 스스로가 정치에서의 선비정신을 회복하는 데, 다시 '수기치인의 정치학'을 부활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가치변환의 리더십에게 요구되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이다.

정치지도자들이 이상의 4가지 가치를 다시 창조하여 구가치를 신가치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중심가치관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러한 가치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정치인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개혁적 지도자라 할 수 있다.

2) 국민통합능력

다음으로 정치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덕목은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능력이다.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직종, 다양한 계층과 지역 등으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상이한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로 만든 국민정신, 국민열정, 국민에토스(*ethos*)를 국가발전을 향하여 조직하고 동원해낼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을 지역으로 직종으로 분열시키고 그 분열을 이용하여 득표를 하여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은 진정한 지도자도 바람직한 지도자도 결코 아니다. 이념으로, 계층으로, 지역으로, 세대로 격심히 나누어지고 상호 분열하고 대립하는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정치지도자이다.

특히 앞으로 이 능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특히 21세기 세계화 시대가 진행되면 될수록 사회 내 계층간, 지역간, 산업간 격차와 분열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면 불가피하게 세계화를 타고 성공하는 계층, 지역, 산업과 그렇지 못한 계층, 지역, 산업 간의 부와 소득격차가 증대하는 경향을 가진다. 따라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분열과 대립은 격화되는 경향을 가진다. 이 문제를 정치지도자의 국민통합능력으로 풀어야 한다. 앞으로는 물론 계층간, 지역간, 산업간 부와 소득격차를 줄이는 사회경제정책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경제정책만으로는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통합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국민통합, 사회통합의 상징역할을 하여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이 분열과 대립의 상징이 아니라 통합과 화합의 상징역할을 하여야 한다.

정치인들이 이러한 국민통합능력을 가지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정치인들이 우선 청렴하여야 한다.

청렴하여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국민신뢰를 얻어야 그 사람들의 주장에 국민들이 귀를 기울인다. 그리하여 옛날부터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하였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것도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믿음이 없으면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하여도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가 자기기능을 하려면 국민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서는 지도자의 청렴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헌법 제 46조 제 1항에 “국회의원은 청렴의무가 있다”

고 천명하고 있다.

둘째, 정치인들은 무엇보다도 ‘국가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자기출신지역 이익이나 자기출신직종 이익 혹은 자기가 속한 정당이 이익을 국가이익보다 우선하여서는 안 된다. 하물며 자기사익을 국가이익보다 우선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어야 한다. 그래서 헌법 제 46조 제 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지도자는 어떠한 이익보다도 국가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왜 그럴까? 국민통합이 성공하려면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지역이익보다 국가 전체이익을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국민통합을 위하여서는 국민 모두가 국가이익을 부분이익보다 중요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민통합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설득하려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정치지도자들 스스로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국가전체이익을 다른 부분이익보다 우선하는 모습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정치지도자가 스스로 국가이익을 집단이익이나 사익보다 우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설득하고 호소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상징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국민분열이 심하고 국민통합이 어려운 가장 주된 이유도 실은 정치지도자들 스스로가 분열되어 있고 부분이익을 전체이익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도층의 분열에서 국민분열이 나온다는 이야기이다.

주지하듯이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의(代議)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출신지역에 따라 혹은 출신직종에 따라 특정 부분의 국민이익을 표출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한 기능을 가져야 함을 당연하다. 이른바 부분이익의 표출기능은 국회의원의 중요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자신이 표출하려는 부분이익과 국가전체이익이 상충할 때는 우선 가능한 한 양자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이익을 부분이익에 우선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여야 비로소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지도자가 될 수 있다.

요즘 FTA 논의나 행정수도이전 논의에서 보여주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즉 부분이익을 전체이익보다 우선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결코 국민통합은 이룰 수 없다. 국민분열만을 부추길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의 실종 그 자체이다.

3) 전문 정책능력

국회는 국정운영에 대단히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 ① 우선 헌법 제 40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법률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야 한다.
- ② 다음으로 재정권을 가지고 있다.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헌법 제 54조 제 1항). 그리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모든 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서만 할 수 있다(헌법 제 59조).
- ③ 국회는 국정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다(헌법 제 61조).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에 대한 해임건의권(헌법 제 63조),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헌법 제 65조) 등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국가의 발전과 올바른 국정운영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결정적 권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들 권능을 국민민복(國民民福)을 위하여 활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정책전문성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정책능력이 낮아서는 국회는 헌법상

기대되는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헌법 제 46조 제 2항에 국회의원들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들이 무엇이 국가이익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직무를 행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국정운영사항과 관련하여 무엇이 국가이익인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것인지를 몰라서는 아무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려 하여도 결코 성공하는 국회를 만들 수 없다.

양심은 양지(良知)가 전제되어야 한다. 올바른 전문지식과 식견이 없는 양심은 무지의 선의를 결과할 수 있다. 그리고 무지의 경우에는 아무리 선의가 있다 하여도 국민민복에 기여할 수 없다. 양심은 반드시 전문적 지식과 식견과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성공하는 국회위원을 만들 수 있다.

정책전문성을 이야기할 때 어느 수준의 정책전문성, 어느 범위와 어느 내용의 정책전문성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모든 국가정책과제에 대하여 깊은 전문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정책전문성은 한두 분야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금융이나 재정분야라던가 혹은 교육이나 노동 또는 외교나 국방 분야라던가 하는 식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몇몇 분야에 대하여는 확실한 정책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만일 국회의원들이 정책전문성이 전혀 없다면 도대체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정치란 본래가 국민민복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정치인이 무엇이 국민민복인지를 전혀 모른다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국민민복을 높이는 것인지를 전혀 모른다면 엄청난 자기모순일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몇몇 분야만이라도 정책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요구하는 정책전문성은 물론 학자들이나 그 분야 전문연구가

들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당 수준의 전문성이 없이는 국가경영에 참여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여기서의 상당 수준이란 그 분야의 전문연구가들의 정책논의를 들으면 우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논의의 옳고 그름 정도는 올바르게 판단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되는 정책능력 중의 하나는 시스템적 사고방식이다.

국가정책은 외교, 경제, 교육 등 여러 분야로 세분할 수 있으나 현실은 각각의 정책분야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 본인의 정책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한두 분야에 한정된다고 하여도 국가정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각 분야간의 큰 상호관계 정도는 볼 수 있는 안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전체를 보고 종합적 사고 내지는 학제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모든 분야의 정책 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과 각 부문간의 상호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식견은 필요하다라는 말이다.

특히 이 시스템적 사고 혹은 종합적 식견은 정치지도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다. 그래야 정책판단에서 크게 잘못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하여 앞에서 주장한 대로 국회의원들이 부분이익의 포로가 되지 않고 국가전체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 예컨대 아무리 농업전문가라고 하여서 FTA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오직 농업의 이해관계만을 볼 줄 알고 국가전체이익과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크게 잘못된 정책 판단을 하게 된다. 따라서 부문을 보면서 각 부문과 전체와의 관계를 함께 볼 수 있는 종합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가전체이익에 봉사할 수 있다.

셋째,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세계화 능력'과 '정보화 감각'을 가져야 한다.

세계화 능력이란 외국지도자들과의 의사소통능력, 외국의 역사, 지리, 문화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 최신 국제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기타 국제적 감각과 교양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보화 감각이란 지식 정보화시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 그리고 첨단 정보기술의 최소한의 활용능력 등을 의미한다. 앞으로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운영을 하려면 정치지도자는 반드시 위와 같은 최소한의 세계화 능력과 정보화 감각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적 사고와 때늦은 능력을 가지고 미래시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에 당면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정책실패이다.

끝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회의원들의 정책전문성이 일반적으로 대단히 약하다는 사실이다.

그 주된 이유는 첫째, 그 동안의 우리나라 정치가 권력투쟁형이었기 국가경영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권력획득 그 자체가 정치의 자기목적 내지 자기목적이 되어왔다. 선의의 정책경쟁을 통한 국민복의 실현이 정치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전문성은 국회의원되기 위한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둘째,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선거제도가 지역구 내지 지역대표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특정지역을 대표한다. 특정직종이나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정책전문성이 높다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특정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할지는 몰라도 특정직종이나 직능이익을 대표하지도, 높은 정책전문성을 대표하지도 못한다. 지금까지의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에서는 국정운영능력이나 전문정책능력이 약해도 돈 선거에 의지하든, 지역감정에 호소하든, 아니면 매일 매일 주민들의 관혼상제에 찾아다니면서 인심을 얻든, 지역 주민의 인기만을 많이 얻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였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정치에서의 지역대표성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와 비중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직종간 혹은 직능간의 정책상의 이해충돌을 다룰 수 있는 직능 내지 직종 대표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예컨대, 16대 국회까지는 노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 없었기 때문에 노사간 갈등이 국회 내에서 수렴되지 못하고 항상 가두 데모의 형태로만 표출된다. 의약분업의 경우나 환경분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회 내의 직종이나 직능 대표성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앞으로는 국정운영에 있어 정책전문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대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지역구의 비중을 줄이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 2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특정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종이나 직능을 대표하거나 특정분야의 정책전문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래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정책전문성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 문제는 뒤에서 재론하도록 한다.

4) 국가의사결정능력 (지도능력)

국회는 합의제 국가의사결정기관이다. 입법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이든 재정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이든 국회는 국정운영을 위하여 집단적 의사결정(collective decision making)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집단적 의사결정의 '수준과 질'이 어떠하냐가 그 나라 국회의 수준과 질을 정하고, 나아가 그 나라 정치의 수준과 질을 정한다. 따라서 그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어떠한 내용의 의사결정을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형식적으로 보면 다수결 원리에 의지하여 의사결정을 하면 민주적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결정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하고 반론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다수결 원리에 따르면 됐지

의사결정의 수준과 질을 따로 논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반론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다수결 원리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조건이다. 그것이 결코 양질의 의사결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즉, 다수결 원리는 의사결정의 수준과 내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특히 다수결 원리는 많은 부작용이 있다. 특히 중요한 부작용의 하나는 포퓰리즘(populism)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정서에 아부하는, 즉 다수의 유권자의 정서에 아부하는 혹은 그러한 정서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태도이다.

그런데 대중의 정서는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경우도 많고 전문적 지식과 이해가 부족해 틀린 경우도 많다. 이러한 대중의 정서에 의지하거나 이용하여 국가정책을 결정하면 그 결정방식이 비록 다수결 원리라 하여도 그 결정은 국가발전에 유해한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국민에 주는 이익은 대중의 눈에 잘 보이고 국민부담비용은 잘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를 정부가 약속할 때 많은 대중은 이를 지지하기 쉽다. 다수결 원리에 의하면 쉽게 지지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의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면 그 나라의 재정은 파탄된다. 이렇게 다수결 원리가 결코 양질의 의사결정을 담보하지 않는다. 히틀러도 다수결 원리를 통하여 독일의 지배자가 되었음을 상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양질의 국가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첫째로 정치지도자들이 포퓰리즘의 유혹을 벗어나야 한다.

포퓰리즘의 유혹을 벗어난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국가지도자(statesman)라고 부를 수 있다.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능력(leading capacity)을 갖춘 국가지도자라고 부른다. 지도자는 대중에 아부하고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대중을 앞서서 계몽하고 계도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이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는 손해가 된다 하여도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이익을 위한 것

이라면 자신의 소신을 고집하여야 한다. 비록 대중의 일시적 정서에는 반하는 것이라 하여도 대중에 아부하지 말고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신념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둘째로는 국가 의사결정과정에서 ‘대중성’과 ‘전문성’을 잘 조화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 ‘국민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고 가지는 견해(ill-informed)이다.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TV를 통한 이미지로, 혹은 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풍문, 비전문가들의 속론 등에 의하여 형성된 견해이다. 이것을 결코 올바른 국민의 뜻이라 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 내용을 잘 이해한 후 가지는 견해(well-informed)이다. 그 프로젝트의 목적, 장점과 단점 등을 충분히 올바로 이해한 후 가지는 견해이다. 이 견해야말로 올바른 국민의 뜻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이러한 올바른 국민의 뜻을 형성할 것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정운영의 전문가와 정책연구의 전문가들의 역할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국민들을 계몽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치지도자들이 나서서 대중과 전문가들과의 이러한 대화와 만남의 기회를 조직화하여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대중성과 전문성의 조화과정을 책임져야 한다.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말고 양쪽의 견해를 서로가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 정치지도자가 최종적 국가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잘 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민주화시대에 걸맞은 미래의 정치지도자이다. 따라서 앞으로 바람직한 국회의원은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국가의사결정과정에서 대중성과 전문성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진 정치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3. 맺는말

이상에서 본 정치지도자의 덕목과 능력을 갖춘 정치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양성할 것인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중심가치의 창조능력, 국민과 사회통합능력, 국가정책능력과 지도능력 등을 골고루 갖춘 신(新)정치인을 어떻게 교육하고 양성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두 가지 양성제도를 생각하여 볼 수 있다. 하나는 ‘국가정책 및 정치대학원’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다양한 민관(民官)의 ‘국가정책 싱크탱크’이다. 우선 국가정책 및 정치대학원에서는 국가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을 가르치고, 국가정책의 입안추진 평가과정, 우리나라 정치과정과 정책과정의 특징 등을 배운다. 동시에 정치지도자로서의 덕목과 자질, 세계화 및 정보화 능력, 우리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제왕학, 치인학, 목민학 등을 배운다. 여기서 가르치는 교수진은 물론 이론전문가인 학자도 많아야 하지만 현장실무 전문가인 전직 장·차관 등의 고급공무원, 전·현직 국회의원 등이 많이 참여하여야 한다. 그래야 이론과 현장의 문제를 균형감을 가지고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배운 후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정치지도자를 지망하는 인재들이 걸어야 할 전형적이고 지배적 패턴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지도자는 아무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한 나라의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오랜 각고의 준비 없이 아무나 쉽게 맡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가정책 및 정치대학원’을 나오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민관(民官)의 ‘국가정책 싱크탱크’이다. 여기서도 국가정책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민관 싱크탱크에

서 각종 국가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을 충분히 다루어본 후 앞에서 이야기한 '국가정책 및 정치대학원'에서 정치에 관한 부분만 단기로 교육을 받은 후 정치현장에 뛰어 들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정책 및 정치대학원'이나 민관의 '국가정책 싱크탱크' 등에서 새로운 정치지도자 후보들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현실화까지의 과도기에는 이미 국회에 들어온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회가 나서서 단기 정책교육과 단기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화하는 방법도 바람직할 것이다. 정치인이 되려면 최소한의 국가정책 전문성을 꼭 가져야 하고 정치지도자로서의 품성과 덕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면 다음은 이렇게 교육하고 양성한 국가정책능력을 갖춘,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덕목을 갖춘 신정치인들을 국회에 많이 진입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그 핵심은 선거제도의 개혁에 있다. 이미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선거제도에서 지역구의 비중을 줄이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 2표)를 대폭 확대하는 방법이다.

주지하듯이 독일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1대1이고 일본에서는 3대2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2대1 정도로 시작하여 점차 1대1로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유권자들의 일상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하여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전체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국회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 후보자들은 선거과정에서 왜 자신들의 명부에 표를 주어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선거가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시시비비보다도 그 명부가 지향하는 국정운영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쟁으로 발전할 것이다. 결국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구 중심일 때와는 달리 정책선거로 발전하게 된다. 최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험이 실증적으로 이를 증명한다.

그리하여 결국 정책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명단이 보다 많은 득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정책능력을 가진 신정치인들의 국회진입이 용이해진다.

이렇게 하여 국회에 신정치인들이 많이 진출하게 되면 다음 과제는 그러한 신정치인들이 초심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한 제도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관혼상제에 쫓아다니거나, 지역감정이나 금권선거 등을 이용하는 구정치적 권력투쟁에 능한 구(舊)정치인의 재선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반면에 입법, 재정, 국정감사 등 국회본연의 정책활동을 열심히 하는 신(新)정치인의 재선가능성은 낮아진다.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질서가 유지된다. 이러한 잘못된 질서를 그대로 두고는 아무리 전문적 정책능력이 있는 양질의 정책세력이 국회에 진입한다 하여도 그들이 장기적으로 국회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권력투쟁형 정치에 능한 구정치인보다 국가경영형 정책활동에 능한 신정치인들이 국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국회운영제도와 운영관행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책활동이 국민들의 눈에 잘 보여야 한다. 또한 그들의 정책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평가결과가 국민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알려질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① 각종 위원회 의사록의 인터넷 공개, ② 국회전속 TV 설치, 전 토론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의 반복상영, ③ 민관합동의 전문평가기구 설치, ④ 국회 음부즈맨의 도입, ⑤ 예·결산제도 및 입법절차의 철저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동시에 신정치인들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는 그들의 각종 정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보좌관 수를 대폭 늘리고 국회 싱크탱크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요컨대 정책능력 있는 신정치세력을 국회에 진입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지만 그들이 우리나라 정치의 주류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정책능력이 뛰어나고 참신하고 유능한 좋은 인재가 국회에 진입한다 하여도 곧 구(舊)정치문화에 흡수되어 매몰되거나 아니면 오래 살아남지 못하고 탈락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정책능력이 있는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이 정치를 피하는 경향이 생기고 그 결과 구정치행태에 능한 사람들만이 국회에서 판을 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그러니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가 없고 이에 실망한 국민들은 정치를 더욱 격렬히 비판하고 외면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정책능력 있는 유능한 인재들은 더욱 더 정치를 피하는 재악순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악순환과 재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정치성공은 불가능하다.

끝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 국민들의 의식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반드시 훌륭한 국민 속에서 나온다. 우리는 사회의 중심가치를 창조하고 변환시킬 수 있는 지도자, 국민을 통합할 능력과 높은 정책적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국가의사를 올바르게 결정하고 국민을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신정치인들이 국회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하여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나라의 정치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비전도 제시하고 국가과제도 제대로 해결하여 국민에게 다시 희망과 꿈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지도자를 가지려면 우리 국민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가질 자격을 가진 국민인가? 그러한 지도자들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가? 선진국에서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후진국에서는 그렇지 못한가? 선진국 국민들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가지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의 투쟁과 눈물로 이루어지는 것이듯이 훌륭한 지도자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지도자를 키워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눈을 부릅뜨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면 적극 밀어주고 바르지 못한 지도자를 보면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정치지도자에게 돈과 음식을 요구하고, 주민의 관혼상제에 인사 다닐 것을 요구하고, 지역현안의 해결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천명한 대로 국회의원이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확실히 이해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훌륭한 정치지도자가 나와야 하고 훌륭한 정치지도자는 훌륭한 국민들만이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참고문헌

子思著·智旭述·覺性請解(1995), 《大道直指》, 總和叢書刊行會.

Burns, James MacGregor (2003), *Transforming Leadership: A New Pursuit of Happiness*,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Zakaria, Fareed (2003), *The Future of Freedom: Illiberal Democracy at Home and Abroad*, New York: W. W. Norton & Co.